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목 차>

1.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심사요건 강화
2.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 사항 규정
3.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우회진입 방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양재 훈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최준우		연락처	02-2100-2993
	과장	김기한		이 메 일	83yjh@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심사요건 강화		
	2.규제조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5호, 별표2의 5호, 별표3의 5호		
	3.위임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제10조의6제1항, 제10조의6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4.5. ~ 5.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 구조인 경우 대주주 심사대상을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하여 타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기존 PEF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대주주 심사건에 대해 업무집행 사원 이외에도, <input type="checkbox"/> 투자목적회사의 출자지분이 30% 이상 주주나 사원, 사실상 지배중인 주주나 사원에 대해 형태에 따라(금융기관, 내국법인 등) 각각의 최소 요건을 갖추도록 규제 강화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피규제집단)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 저축은행(79개사) 및 금융 소비자 등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직접적인 저축은행 인수 대신 도관 법인을 활용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주주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의 피심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어, 비용대비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기타	12.일 물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원 칙 허 용 ·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대주주의 요건	<별표1> -----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5. (현행과 같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 ----- ----- -----투	----- ----- ----- ----- -----
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u>업무집행사원으로서는 그 투</u>	----- ----- <u>- 업무집행사와 그 출자지분</u>
<u>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u>	<u>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주나</u>
<u>수행하는 자가</u> 다음 각 목의	<u>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u>
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u>인</u>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별표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 건	<별표2> ----- --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경우</p>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p> <p>-----</p> <p>-----</p> <p>-----</p> <p>-----</p> <p>-----</p> <p>-----투</p> <p>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p>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 <p>의 <u>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u></p> <p><u>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u></p> <p><u>수행하는 자가</u> 다음 각 목의</p>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p> <p>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p> <p>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별표3>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p> <p>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p> <p>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p> <p>경우</p>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u>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u></p> <p><u>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주나</u></p> <p><u>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u></p> <p><u>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u></p> <p><u>인</u>-----</p> <p>-----</p> <p>-----</p> <p>-----</p> <p>-----</p> <p>-----</p> <p><별표3> -----</p> <p>-----</p> <p>5. (현행과 같음)</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투 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u>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u> <u>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u> <u>수행하는 자가</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u>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u> <u>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주나</u> <u>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u> <u>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u> <u>인</u> ----- ----- -----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한 저축은행 소유는 일종의 도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 현재는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 및 별표 1~3에 대주주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규정

- 그러나, 특수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 등은 저축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권과 달리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심사의 공백 우려

- 특히 저축은행은 지분소유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등 대주주의 영향력이 클 수 있는 바, 심사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상기 사항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의 요건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기준 수립이 필요한 사항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특수목적회사의 주주 등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 대상의 범위 등에 대해 타법의 유사사례를 검토

- 금융사지배구조법령에서는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는 주주나 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사원에 대해서 요건 심사 진행

- ☐ (선택근거) 업권별 규제 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심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등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입법예고 진행 이전

3. 규제목표

- ☐ 직접적인 저축은행 인수 대신 도관 형태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주주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대주주 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건전경영 유도 및 예금자 등 저축은행 거래 상대방 보호 등
- ☐ (규제수단) 규제로 인한 실익이 더 크며, 업권간 형평성 고려 시,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1조,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타 법령과 유사한 수준의 적절한 규제안으로, 준수 가능성 높음

○ 규제 차등화 방안

- ☐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금번 규제안은 기존 대주주 심사 시 그 대상이 일부 확대되는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심사에 대해 인력 소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상 차이로 인해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 동 사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 금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대주주가 갖춰야 하는 요건에 대해 적용 범위를 타법(금융사지배구조법) 수준을 확대하는 건으로,
 -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건전경영 유도,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 기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 사항 규정		
	2.규제조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3.위임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4.5. ~ 5.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5제3항)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관련 광고 시 거래자 보호를 위해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시행령 에서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 하락시 추가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 등을 광고에 포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피규제집단) 저축은행(79개사)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 저축은행 이용자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으로써,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경미한 규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저축은행으로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경고 문구 삽입 으로 인해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은 높을 것으로 예상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⑤ (생략)	제11조의4(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⑥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이용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2.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u><신설></u>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 각호의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 상품 중 대출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저축은행법(제18조의5제3항) 개정('18.2.21)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 포함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 (정부개입 필요성) 저축은행법 상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축은행이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대출상품 광고 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문구를 타법의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

○ 대부업 및 여전업의 경우, ①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②대부계약과 관련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 저축은행업권의 경우는 신용등급 하락에 가능성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도입

- ①저축은행 대출상품 이용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②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 세부 문구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에 위임(시행령 제11조의4제7항)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① ~ ② (생략)

③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 중 대출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생략)

② 1.~5. (생략)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광고) ① 1. ~ 2. (생략)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 및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 ☐ (선택 근거) 대출상품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중 간과하기 쉬운 부분(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타 업권 사례(대부업,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을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도입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저축은행 관계자 및 이용자 등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입법예고 진행 이전

3. 규제목표

- ☐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으로써,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토록 함

☐ (규제수단) 금융소비자가 대출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광고로, 광고에 금융소비자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한편, 광고시 문구 일부를 포함시키는 건으로 저축은행으로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준수 가능한 것으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제1항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4 (입법예고 중)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업계 자율로 광고시 포함해야할 내용을 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안내토록 既 규정하고 있음(저축은행 중앙회)

- 금번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에 대해 법으로 구체화 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 현재 저축은행업 자율규제로 과도한 대출 경고문구를 여신상품 방송 광고시 포함토록 규율 중

* 아래의 4개 문구 중 1개를 선택 (신용등급 관련 사항도 포함)

-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2) 과도한 대출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3) 대출 받기 전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 4)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 규제 차등화 방안

- ☐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기존에도 저축은행 광고를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인력 소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기존에도 저축은행 광고를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동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포함해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업계

및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할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달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 금번 개정은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으로써,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별도의 비용없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로서도 규제 준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우회진입 방지		
	2.규제조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3.위임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4.5. ~ 5.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업으로 우회진입 가능성이 있어,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요건(인가, 주식취득)을 동일하게 적용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에도 대부업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수준으로 규제(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 적용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려는 대부업자 등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대부업자가 간접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직접 대주주가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소유 규제 강화에 따라 대부업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나,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으로 저축은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승 ○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비용·편익 분석 생략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대주주의 요건</p> <p>비고</p> <p>1. 제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제1호사목</u> 또는 제4호라목(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라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p>	<p><별표1> -----</p> <p>비고</p> <p>1. 제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제1호바목(대부업자에 한함) 및 사목</u></p> <p>-----</p> <p>----- (이하 생략)</p>
<p><별표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p> <p>비고</p> <p>1.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제1호바목</u> 또는 제4호다목(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p>	<p><별표2> -----</p> <p>비고</p> <p>1.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제1호마목(대부업자에 한함) 및 바목</u> -----</p> <p>-----</p> <p>(이하 생략)</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현재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의 설립·인수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 대부업체의 이익을 위해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및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

*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금지,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계열 대부업체로 매각 금지 등

- 그러나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동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저축은행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 존재

* 애규온캐피탈(HK저축은행 대주주), 아주캐피탈(아주저축은행 대주주)

□ (정부개입 필요성) 저축은행 고객 등 금융소비자,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환경 마련을 위해 규제를 일원화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현재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요건(시행령 별표3)으로서는 이해방지상충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해상충방지계획 등을 마련토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선택 근거) 대부업자의 자율적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법령상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여 규율할 필요한 바,

- 대부업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 적용받는 규제 사항을 자회사를 통해 설립·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부업자 저축은행 관계자 금융소비자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입법예고 진행 이전

3. 규제목표

- 대부업자가 간접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직접 대주주가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 도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목적)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우회진출을 제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
- (규제수단) 대주주가 대부업자라면 필수 심사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통해 설립·인수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로, 우회 경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 보기 어려움
 - 특히 고금리 대부업으로의 유도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국제기준	일몰설정	원칙허용·
기술	경쟁	중기	규제설계	정합성	여부	예외금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부업자의 편법적 우회진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그 심사 요건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 현재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대주주로서의 자격 유지조건에는 이해상충방지계획 마련이 포함 되어 있는 사항인 바, 준수 가능성이 높음

○ 규제 차등화 방안

☐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모든 대부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이미 수행하는 업무로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가 없어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既수행 업무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 이해상충방지체계(대부업 폐쇄 등)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우회진입 경로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건으로

○ 동 사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금번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가하는 경우에도 직접 설립·인가할때와 마찬가지로 수준으로 요건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